

서울특별시 성동구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
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2. 2. 11.

행 정 재 무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2. 1. 26. 성동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2. 1. 27.

다. 상정일자: 2022. 2. 9.

(제264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)

2. 제안개요

가. 제안설명: 성동구청장

나. 제안이유

우리 구 안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, 구청장의 책무(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)

나.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및 조치(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)

다. 학교 등의 급식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라.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의뢰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규: 「학교급식법」, 「영유아보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유아교육법」
- 나. 협조부서: 교육지원과
- 다. 예산조치: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·시행 시 관련 예산 편성
- 라. 입법예고: 2021. 12. 23. ~ 2022. 1. 12.

5.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

가. 제안취지 검토

- 본 제정안은 성동구 안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제출된 것으로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됨

나. 조례안 주요 내용

-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
- 안 제4조(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)에서는 구청장이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급식시설 별로 연 1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표본 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고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급식시설은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
- 안 제5조(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)에서는 검사

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의 조치사항으로 결과와 목록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함

- 안 제6조(교육)에서는 급식 관련 종사자의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
- 안 제7조에서는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
-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방사능에 오염된 농수산물 수입 등으로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
- 2021년 4월 13일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배출 결정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 137만 톤이 최대 30여 년 간 바다로 방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
- 서울시교육청 등 13개 교육청에서 「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」, 서울시는 2014년 「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」, 서울시 자치구는 「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」 등 6개 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, 전국 광역·기초단체는 총 15개 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·운영 중¹⁾임.

- 2020년 12월 2일 「식품위생법」,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,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등 식약처 소관 6개 법률 개정안이 어린이 급식 및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
- 이에, 「식품안전기본법」 제4조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식품안전정책을 수립·시행할 경우 과학적 합리성, 일관성, 투명성,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, 「학교급식법」 제10조(식재료),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영유아 및 학생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 섭취로 인한 위해성이 성인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식재료의 선택권이 없는 단체급식에 의존하는 영유아 및 학생들의 급식에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본 조례 제정취지는 타당하며 식재료 검사방법,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 절차에 있어서도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적절한 제정안으로 사료됨

6. 질의 및 답변요지: 회의록 참조

1) 광역(2): 서울특별시, 경상남도

기초(13): 강남, 구로, 노원, 동대문, 서초, 중구, 광양시, 광주 동구, 군포, 양산, 울산 북구, 의정부, 천안

7. 토론요지: 없음

8. 심사결과: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하였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